

日本の 석유정책이 방향전환하고 있다

규제위주에서 탈피... 석유산업의 경영체질 강화

日本の 석유정책이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 日本 通産省은 지금까지 정부규제 위주의 석유정책을 수정, 시장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석유산업의 경영체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석유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石油審議會石油部會(部회장 円城寺次郎)에 「石油産業기본문제검토위원회」를 설치, 이 위원회에서 내년 6월까지 새로운 석유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중장기계획에서는 석유생산, 판매, 제품수출입등에 관한 각종규제의 완화·철폐시기를 명시한다. 또 자유화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석유업계의, 과잉시설 폐기, 유통구조합리화 등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日本 通産省은 석유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유국이나 메이저(국제 석유 자본)에 대해 日本을 매력있는 시장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기본과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 석유산업은 과잉시설을 배경으로 한 과당경쟁으로 석유산업의 수익성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규제위주의 종래의 석유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앞으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전제로 석유업계의 체질개선을 촉진시키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석유공급계획에 따른 생산·판매의 수급조정, ② 석유제품교역, ③ 석유비축 등에 관한 각종규제와 행정지도를 재검토, 87년부터 5년간 정도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계획에서 각종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철폐시키기로 했다.

이 계획에서는 생산·판매에 관한 각종규제의 완화를 위해 정제시설의 합리화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日本 석유산업의 설비가동률은 60% 수준으로 70%가 넘는 歐美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通産省은 과잉시설의 폐기를 석유산업 체질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이러한 계획에 따라 석유업계의 합리화계획의 실행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제품교역에 있어서도 외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부터 휘발유등 일부 석유제품 수입자유화에 이어 앞으로 자유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영체질을 위해 석유유통구조의 개혁목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美國이 국가비축의 확대를 추진하는등 국가비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비축의 官民분담문제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 <일본경제신문 11/6>